

소요정비의 100분의 60이상 보조

### 3. 의견제출

위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열린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313호,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3855, 팩스 2100-4316)

###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31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0년 4월 30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시송달서

다음 채납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에 의한 퇴직급여 감액지급 대상자로서 퇴직급여 환수금 반납 고지서를 수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으나,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며, 송달의 효력은 공고와 동시에 발생합니다.

◀다 음▶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송달 대상자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 이후 급여감액 사유가 발생한 자이거나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조 및 제7조제1항에 의한 급여감액 대상자로서, 공무원연금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감액대상 퇴직급여 또는 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납부할 금액은 납부일에 따라 변동이 있으므로 납부하시기 전에 공무원연금공단 관할지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대상자

(단위 : 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퇴직기관	환수원금	연체료 등	환수고지액	관할지부
권영태	570821-*****	양구경찰서	6,804,480		6,804,480	서울
김규영	570917-*****	송파세무서	8,490,240		8,490,240	서울

성명	주민등록번호	퇴직기관	환수원금	연체료 등	환수고지액	관할 지부
문수흙	571104-*****	북인천세무서	8,124,840		8,124,840	서울
홍우식	380108-*****	부산광역시교육청	10,988,280		10,988,280	서울
전풍식	550910-*****	대구광역시수성구	40,388,170	73,017,350	113,405,520	부산
김정학	610616-*****	동래세무서	5,324,890	13,887,110	19,212,000	부산
원석만	570107-*****	용당세관	27,734,660	60,406,460	88,141,120	부산
박용준	611205-*****	밀양경찰서	5,762,330	17,601,560	23,363,890	부산
김영봉	451025-*****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청	177,040	394,120	571,160	부산
박상건	431213-*****	창원시	74,359,700	100,867,710	175,227,410	부산
박병호	391204-*****	정남지방병무청	83,613,680	162,948,450	246,562,130	부산
조성호	690814-*****	전라북도 남원교육청	21,273,760		21,273,760	전북
김형근	601105-*****	전라북도교육청	24,271,350		24,271,350	전북
장석기	580523-*****	익산시	104,734,470		104,734,470	전북
백오남	410527-*****	완주경찰서	67,291,110	129,006,300	196,297,410	전북
나인기	620201-*****	부안군	19,312,990	36,303,070	55,616,060	전북
박호순	590924-*****	전라북도	20,547,830	30,643,510	51,191,340	전북
라춘식	551128-*****	군산해양경찰서	65,758,250	48,841,250	114,599,500	전북
이영희	460210-*****	경상북도교육청	29,851,340	74,568,880	104,420,220	전북
임택문	710528-*****	국군제9965부대	11,354,710	10,875,360	22,230,070	강원
김명한	520910-*****	강릉경찰서	36,485,260	50,851,360	87,336,620	강원
김창호	540825-*****	원주운전면허시험장	45,521,970	68,845,410	114,367,380	강원
최미경	760801-*****	최진일, 최종찬의 법정대리인	32,366,440	52,880,800	85,247,240	강원
김한중	470825-*****	광주광역시	14,110,890		14,110,890	광주

※위 금액은 2010년 4월 20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납부기한 : 2010년 5월 30일

-납부은행 : 국민은행 360-01-0026-311(예금주: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관할지부

지 부	주 소	연 락 처
서울지부	우 135-706 서울 강남구 언주로 459(역삼동 701)	02)560-2608
부산지부	우 601-705 부산 동구 범일2동 828-9	051-630-6855
전북지부	우 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14-3 한국투자증권빌딩 3층	063-281-7712
강원지부	우 200-938 강원 춘천시 온의동 513 교직원공제회빌딩 302호	033-257-4791
광주지부	우 502-740 광주 서구 농성1동 260	062-350-5067

#### ◎환경부공고제2010-151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결정('09.12.15)에 따라 환경부가 담당하던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 업무와 지방환경청의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업무의 지방이양을 추진하여 지방행정의 자율성 확대를 도모하고,

폐차업자의 폐자동차 재활용결과 보고주기의 완화와 전기·전자제품을 수출 및 연구용 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업체의 경우 제품 재질·구조 개선사항 평가서 제출 의무면제 등을 통해 업계부담을 경감하고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중앙행정관한의 지방이양 추진으로 지방행정의 효율성 도모

(1)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보고와 검사 등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